

2011년도 계육산업 결산

2011년 육계 사육부문 총정리



유재석 대표
(주)계흥

신묘년(辛卯年) 토끼의 해였던 2011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사육부문 정리에 앞서 지난 1년간 우리 축산업과 양계업을 간단히 되돌아보자.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 양돈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한 달 뒤인 12월 29일 충남 천안 풍세면 종오리 농장과 전남 익산시 망성면 육용종계농장에서 동시에 발생한 AI로 인해 참으로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는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2011년을 맞이하였다.

결국 2011년 5월 16일 마지막 발생한 AI가 7월 3일 완전 해제되면서 6개 시·도, 25개 시·군·구 총 53건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 6,472,000수가 매몰 처리되면서 긴 악몽의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겨울철 반복되는 한파와 AI에 의한 전파방지 목적으로 일부지역에 입추제한조치가 내려졌고 이웃하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영향이 매우 컸다. 이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일본상황과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로 육계 산지 가격은 강보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국제 원유 값 상승으로 사육농장의 연료비용이 증가하고 생계 및 도계품, 사료 등의 운반비가 상승하고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업계의 가장 성수기인 삼복에는 안타깝게도 지리한 장마가 다른 해 보다도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태풍과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소비둔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육계 가격의 진폭이 커졌으며 더불어 병아리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된 한

해였다. 또 대기업의 육계시장 진출이 이어졌고 계열주체와 사육주체 간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요청하는 문제들이 제도권으로 부각되었다.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쳤고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축산 계열화 사업의 법률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었고, 2월 5일부터는 배달용 닭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되면서 국내산 닭고기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7월 1일부터는 그간 사료 내 첨가되었던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 중단되었고 향후 농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사용이 강화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가장 관심이 되었던 한·미 FTA가 미국은 의회 비준이 통과되었고 우리나라는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국회 비준이 여당 강행처리로 지난 11월 22일 통과되었다.

육계사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장 상황을 대략적으로라도 앞에서 언급한 이유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사육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업계의 각 분야는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존과 보완을 통한 업계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육부문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소비자의 NEED 변화

올해도 사육부문에서의 가장 큰 트렌드는 제품의 안정성과 동물복지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48개 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글로벌 시대에 진입해 있는 오늘날 빗장을 잠그고 우리 것만 고집하고 다른 나라 제품을 배척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 되었다. 과거에는 제품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판매했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산자가 충족시켜줘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닭고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제품의 안정성과 기능성, 신선도 유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사육부문에서는 동물복지까지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략적으로 1년에 약 60만 톤 정도의 닭고기를 소비하는데 이중 2011년에 수입되는 닭고기는 17%에 해당되는 10만 톤 내외 정도이다.

닭고기의 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물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 있는 우리 역시 국내산 닭고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환으로 2011년 사육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돌아보고 2012년의 목표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2. 사육시설 현대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과제임에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다.

사육시설 현대화는 증가되는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앞서 언급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가장 핵심 요소이다.

특히 올 초의 한파와 여름의 집중호우, 여름철 무더위 등 4계절이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육여건상 계사의 시설이 열악한 농장에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용 상승 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며 생산자와 계열주체 모두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계절적 소비성향은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했고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계열주체의 성수기이고 이 때 시설이 열악한 경우 입추를 꺼리게 되어 사육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양계농장의 전체 가구수 중 시설노후화로 인한 사육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농장이 전체 농장수의 40~50%로 조사되었다. 사육농장도 향후 허가제가 시행되고 HACCP인증이 모든 농장으로 의무화 될 경우, 또 면세유에 대한 혜택이 감소할 경우, 규모가 가구당 6만수 이상의 전업화가 진행될 때 50% 정도의 농장이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물론 사육농장의 사육시설 현대화에 따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계열주체의 병아리 품질문제와 동일계군 동시입추, 동시출하 등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지금은 시설 현대화와 함께 규모증가가 이루어진 농장도 농장운영에 있어서 계열주체의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한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현실 때문에 사업소득이 안 되도 어쩔 수 없이 농장 회전을 위해서 계약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하루 빨리 각 계열주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들이 계열주체와 사육농장 간에 불신의 벽을 만드는 주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해마다 사육시설 현대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조건이 워낙 까다롭고 현실성

이 떨어져 다양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양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학교 졸업생이나 부모가 현재 양계를 하고 있는 경우 자식이 축산관련학교를 졸업했을 때 시설개선을 통한 전업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것도 대안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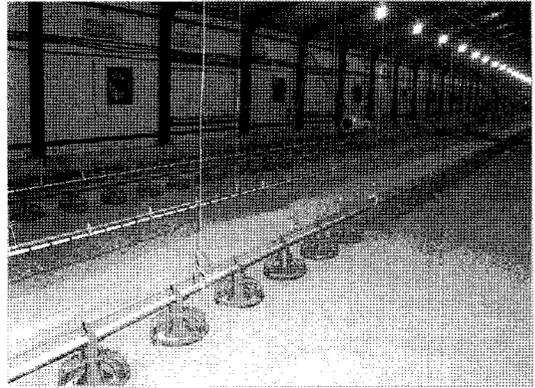
이제는 양계산업도 부업이 아닌 전업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한 농축산의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사업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농장마다 계사 및 계사내부의 사육시설을 완전하게 파악하여 기록하고 시설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농장에서 어려우면 계열사에서 직접 조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육시설의 등급에 따라 농장마다 차등으로 적정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계사단열수준과 적절한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기시설, 기준에 부합되는 급이기와 급수기의 종류와 적정 개수, 계사 진출입로의 수준, 위생 및 방역시설, 전기용량 및 안전시설, 열풍기의 종류와 용량 등 양계사업을 하기 위한 적정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점검해야 한다.

머지않아 농장의 내·외부 사육시설이 기준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에는 양계사업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미리미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3. 축산 계열화법 제정

사육부문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육의 방향설정과 육계 계열화사업의 근간을 법적 테두리에서 안정화시킨다는 큰 의미가 있기에 이 부분은 사육부문의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아직 확정된 법제정은 아니지만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는 여러 번 공청회를 거쳐 분야별 충분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연내 “의원입법상정” 형태로 제정이 될 전망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 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은 축종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다 아는 바와 같이 40여년의 양계역사를 통해 양적인 성장과 부업형태에서 전업형태로 전환되면서 축산이 비약

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 계열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열주체와 사육농가 간에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불신의 벽이 깊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업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초석을 다져도 경쟁력을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현실은 나만 살자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이대로 두면 축산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공감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축산물은 식량안보차원에서조차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시대에 도래했고 우리 축산인은 이에 발맞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사전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 준비의 첫 번째가 축산인이 하나로 뭉쳐 이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보여줘야만 한다. 이런 상황 변화의 토대 위에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축산인 모두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양계분야를 기준으로 그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계열업체와 농가는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정책자문을



지난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위한 축종별 축산계열화사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경비의 지급과 관련 출하완료한 날로부터 25일(영업일 기준)이내 최단기간에 지급해야 하고 계열업체가 공급하는 원자재인 병아리와 사료에 대한 품질 등이 기준에 부합되는 상태에서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했다.

또 계열업체와 농장 간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모범농장 및 모범사업체를 선정하여 각종 정부지원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농가와 계열주체 모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각의 대표성을 갖고 평소에 상호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축사

육계농장과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상호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중앙 축산 계열화사업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 계열화법에서는 계열화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열농장,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 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직 이 법이 완전히 제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이상적인 법 제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어 상기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며 불신의 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배려와 이해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이제는 계열주체도 농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 사업을 함께 한다는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농가도 계열주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장에서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4. 사료용 항생제 첨가 완전금지

올해 7월 1일 국가 정책에 의해 전격적으로 항생제 안전사용에 대한 방침이 강화되면서 사료용 항생제 첨가가 완전 금지되었

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수의사 처방전이 도입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선택기준이 신선도와 안전성으로 변화하면서 당연하게 실시되는 국가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어려움과 함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신선도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시대의 흐름에 맞춰 친환경축산과 질병차단이라는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 그동안은 질병관리의 수단으로 항생제 처치를 통해 해결해 왔으나 항생제 잔류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2011년 7월 1일부터 사료용 항생제 첨가를 완전 금지하게 된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육에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 감소다. 면역력과 축종의 강건성이 저하되는 문제와 각종 영양소 소화율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오히려 환경오염원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생산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는 사업 전반의 위기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양관리의 집중화이다.

닭이 가지고 있는 유전형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령에 맞는 적절한 환경개선을 통한 사양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육추기간의 초기관리는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안이한 육추관리로는 항생제 사용금지라는 국가 정책의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

육추관리의 집중화에 비중을 두는 사양관리의 전환이 필요하며 아울러 무항생제 사육의 시대적 흐름에 생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몇 가지 생각해보자.

이른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항생제 대체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여 유익한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및 배양물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사료 내 영양소 이용을 높이기 위해 공급하는 효소제가 있다. 세 번째는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위장관 PH를 조정하는 각종 유기산제가 있다.

또 항산화, 항균, 면역조절 등의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식물체와 추출물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더불어 닭이 본래 가지고 있는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질병 저항성을 높여주는 물질인 면역 증강제가 있다. 이 밖에도 닭에서 소화되지 않고 위장관 내 일부 제한된 특정 미생물 생장이나 활성을 선택적으로 촉진·억제하여 가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난소화성 물질인 프리바이오틱스 등이 있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모든 항생제 대체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양관리의 기본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육추기간의 초기관리나 바닥관리, 환기관리, 내부 온·습도관리 등 가장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점검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5. 대 닭 사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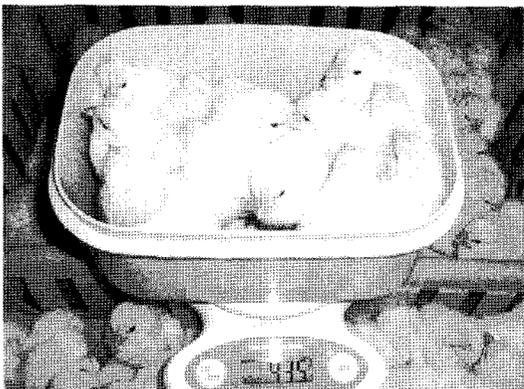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사육 경쟁력이 요구되는 한 해였다. 특히 다른 나라와의 FTA를 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볼 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생산원가를 줄여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여기에 위생과 안전, 신선도와 동물복지까지 고려한 생산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육계의 생산원가에서 사료 다음으로 높은

것이 병아리인데 현재 우리나라 부화장에서 생산원가는 육용병아리 1마리가 500원이 넘는다. 이를 kg당으로 계산할 경우 1.53kg으로 출하할 경우는 333원인데, 출하 중량을 양계 선진국처럼 2.8kg 정도로 했을 경우 178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병아리 1마리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출하중량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계열사의 출하중량이 평균 1.53kg 정도로는 생산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이미 육계는 닭고기 맛 자체를 선호하는 통닭 개념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양념이나 소스의 영향력이 높은 부분육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육방향도 부분육이나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생산력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이를 위해 계사현대화 사업으로 내부 시설 개선이 필수적이고 백신시기 및 사료의 성분조정, 사육밀도의 조정, 출하차량 변경, 점등프로그램 변경 등 전반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요즘 거론되고 있는 고상식 계사는 미래 대 닭 사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육환경으로 판단된다.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바 추진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고상식 계사는 깔짚 문제 및 계분재사용 문제, 환경오염 문제, B급 발생증가 등 각종 현안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대 닭 사육에서 암수 분리사육은 이미 3~4년 전에 필요성과 효과가 검증된 사안으로 적극 활용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시장의 소비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생산원가 절감 및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보면 대 닭 사육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6. 면역 억제성 질병 증가

올해 사육과정 중 특징으로는 면역 억제성 질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생산성을 감소시킨 부분이다. 육계 뿐 아니라 종계에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종계의 상황에 의해 육계사육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유전 육종의 발달과 시대적 요구제품

의 변화와 맞물려 빠른 증체, 영양소의 효율적 이용, 근육비율의 증가, 항생제사용 금지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산성 감소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면역억제는 감염성 질병과 곰팡이독소 등이 주원인이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불량한 사육환경이나 부적절한 사양관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더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 억제가 되면 사육성적이 낮아지고 균일도가 낮아진다. 증체는 당연히 감소되고 사료요구율이 높아진다. 백신반응도 자주 일어나며 폐사수가 증가하고 2차 세균감염이 쉬워진다. 대체로 면역기관은 위축되는 것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생산성에 악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전염성F낭병(감보로병)이 있는데 이는 백신실시 및 혼중소독, 사육환경에서의 각종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켜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닭 전염성 빈혈증(CAV)이 있는데 올해 지속적으로 농장에서 문제된 질병이다. 단독 피해도 있지만 다른 질병과 복합 감염되는데 종계로부터의 수직감염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장에서 계군별 100% 일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즉 종계의 동일 계군을 농장에 분양했을 때 반드시 유사성이 확

인되지 않았다.

이 질병은 사육환경이나 2차 감염의 영향이 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양계장에서 계군 간 수평감염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곰팡이독소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사육과정에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결과가 나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예측이 어렵다.

농장에서 초기 및 전기사료 급여 시 곰팡이 흡착제나 독신바인더를 미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농장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보면 사료자체의 영향과 급이기 배관, 벌크통 등 곰팡이 오염이 20~30%는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감염 자체 차단도 중요하지만 사육환경의 개선은 더욱 중요한 관리방안이다.

계군의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 면역억제성 질병감염에 의한 피해가 농장마다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입추 시부터 사육 전 기간에 걸쳐 계사 내부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일령별 적당한 환기와 바닥 깔짚관리, 급수기 및 급이기 관리, 사료 영양의 균형유지, 곰팡이 독소오염제거, 백신프로그램 준수, 차단방역과 소독, 계사내부 습도관리 및 조도관리, 밀사예방 등 면역력을 저해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사양관리가 중요하다.

7. 농장 영입전쟁

육계농장의 확보 문제가 올해 가장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문제 역시 사육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육부문에 포함시켜 다뤄야 되는지 고민을 했지만 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농장 영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추양보다 농장이 많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반대 상황이면 농장 확보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닭고기 소비 측면에서 볼 때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별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은 사육농장이 부족하여 각 계열주체마다 농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른바 계열주체 비수기(농장 성수기)인 봄과 가을에는 농장 입추 회전일이 길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즉 계열주체 성수기인 겨울이나 여름에는 오히려 출하 후 얼마나 빠른 시기에 입추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윗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봄, 가을엔 계열주체가 병아리를 주지 않아 40일이 넘도록 농장이 사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2개 회사의 대기업이 양계산

업에 진출하여 농장 부족 현상을 더욱 부채질했으며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회사는 변칙 계약서를 남발하며 사육 선급금이나 입추선급금, 시설개선자금 명목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사용했고 사육비도 상황에 따라 사육농장에 수당 100원이나 kg당 100원씩 주는 등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금력을 동원하여 농장을 확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방식은 사육성적 향상이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장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농장의 선택권을 감소시키면서 계열주체에 예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계열주체는 시장의 안정화와 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사육농장도 지급되는 돈의 액수만 보고 계약과 이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원가절감과 사육성적 향상만이 소득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인지하



고 그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올 여름 일부 계열주체의 과도한 자금력에 의한 농장영입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의구심과 함께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맺음말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자명한 몇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첫째 닭고기를 소비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많아졌고 더욱 까다로워졌다.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하면서도 사육분야에 동물복지까지도 염두하고 사육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고 대체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둘째는 한·미 및 한·EU 등 FTA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먹거리 시장이 세계 시장과 경쟁해야 하고 경쟁력만 갖추면 수출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기이자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경쟁력 있는 출하중량으로 사육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개선과 암수분리사육 및 사료 품질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질병차단을 위해 사전 예방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HACCP 등을 통한 농장 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원종계 및 종계로부터 근본적인 질병차단을 해서 우량의 품질 좋은 병아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이제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상호 신뢰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육농장과 계열주체가 서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축산 계열화법”을 잘 만들고 이행하여 모두가 공멸이 아닌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올해의 업계 문제점들을 점검해보고 육계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사육부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간다면 반드시 미래의 육계산업은 발전할 수 있으리라 필자는 확신한다.

농장도 변화해야 하고 계열주체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2012년 우리 업계화두는 “변화”가 아닐까 싶다. 사육을 담당하는 필자 역시 내년에도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